보건복지부

지역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



목 차

Ⅰ 왜 포용적 복지인가?

Ⅱ 지역사회로 향하는 포용적 복지

Ⅲ 한 걸음 더 나아가기



Part I

지역과 함께 하는
포용적 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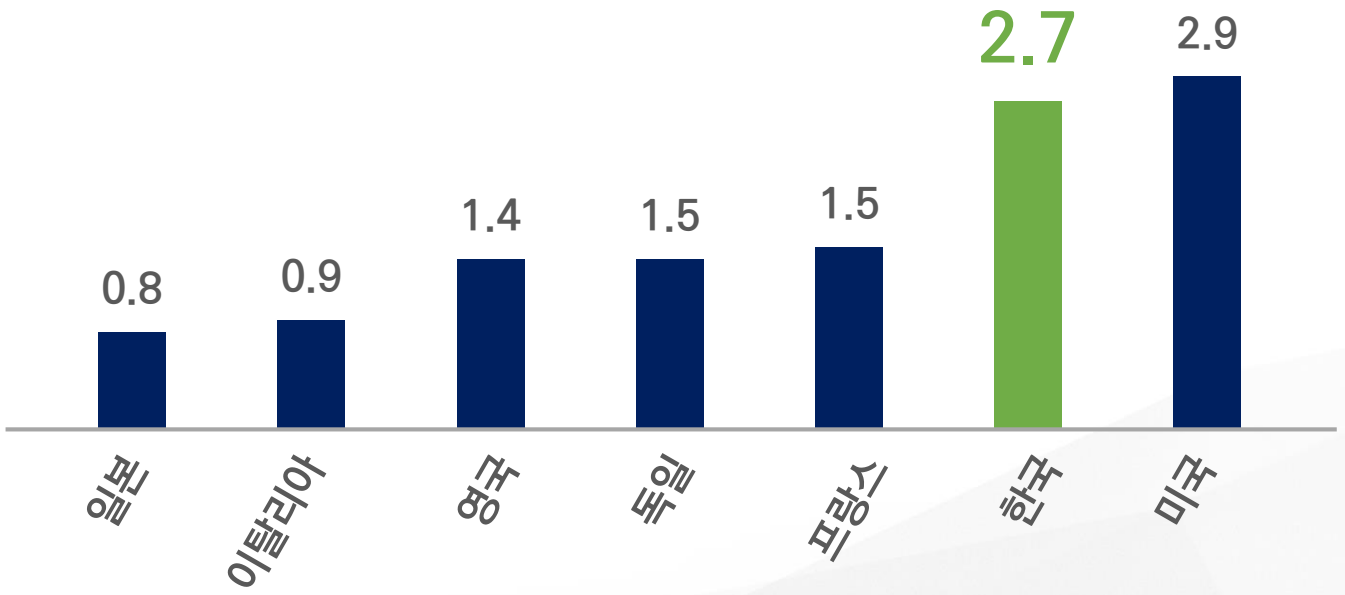


왜
포용적 복지인가?

‘30-50 클럽’ 7번째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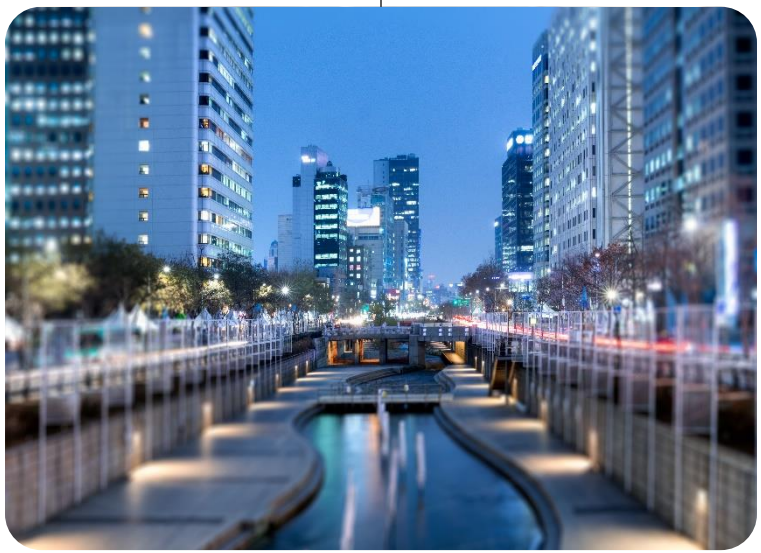


경제성장률(%, 2018)



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

경제규모 **11위**



시민참여율 **10위**

(38개국 중)



*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(2017)

그러나, 상대적으로 뒤쳐진 "삶의 질"

삶의질 지수



공동체 지표
(지원 관계망의 질)



*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(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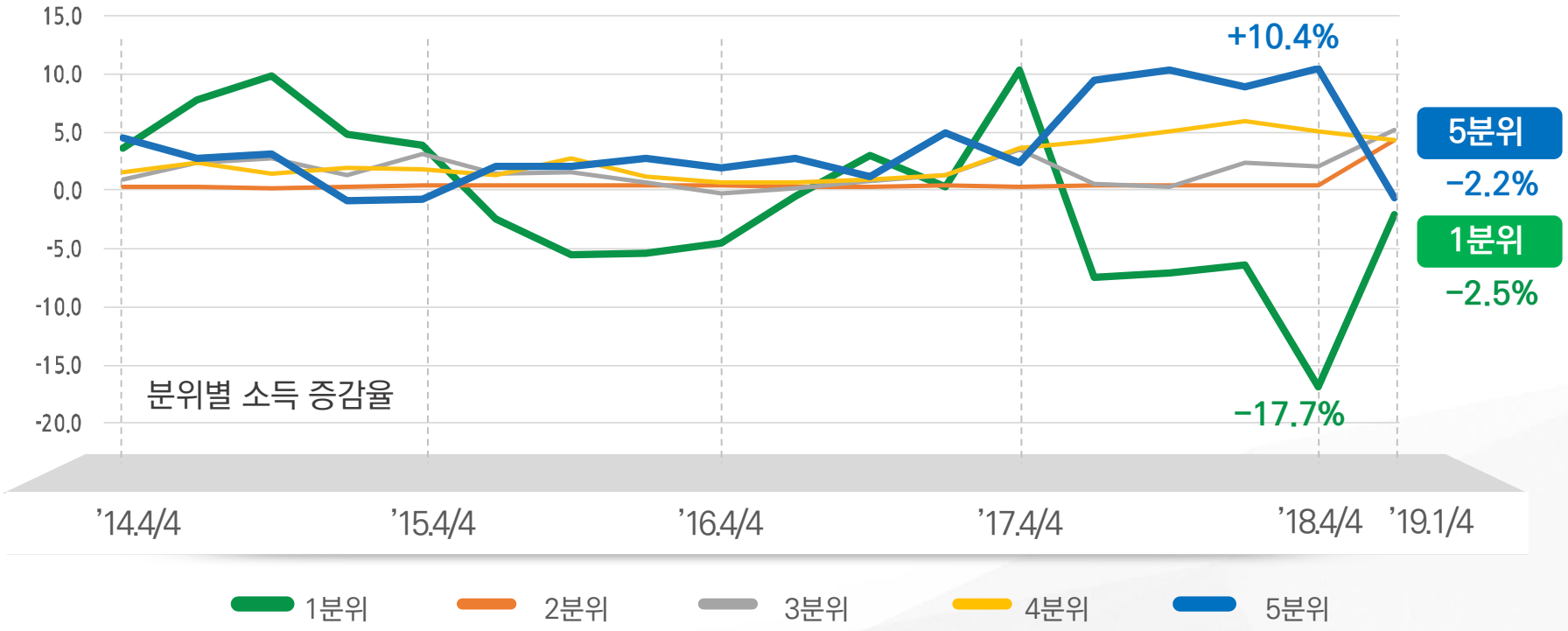
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 민생지표 비교

	G7국가	한국
상대적빈곤율	11.8%	17.4% ('17)
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	20.7%	11.1% ('18)
지니계수 개선율	31.5%	12.6% ('17)

* 현대경제연구원, OECD, 통계청

높은 빈곤율, 양극화 심화

- 빈곤율('17년)
  우리나라 17.4%, OECD 11.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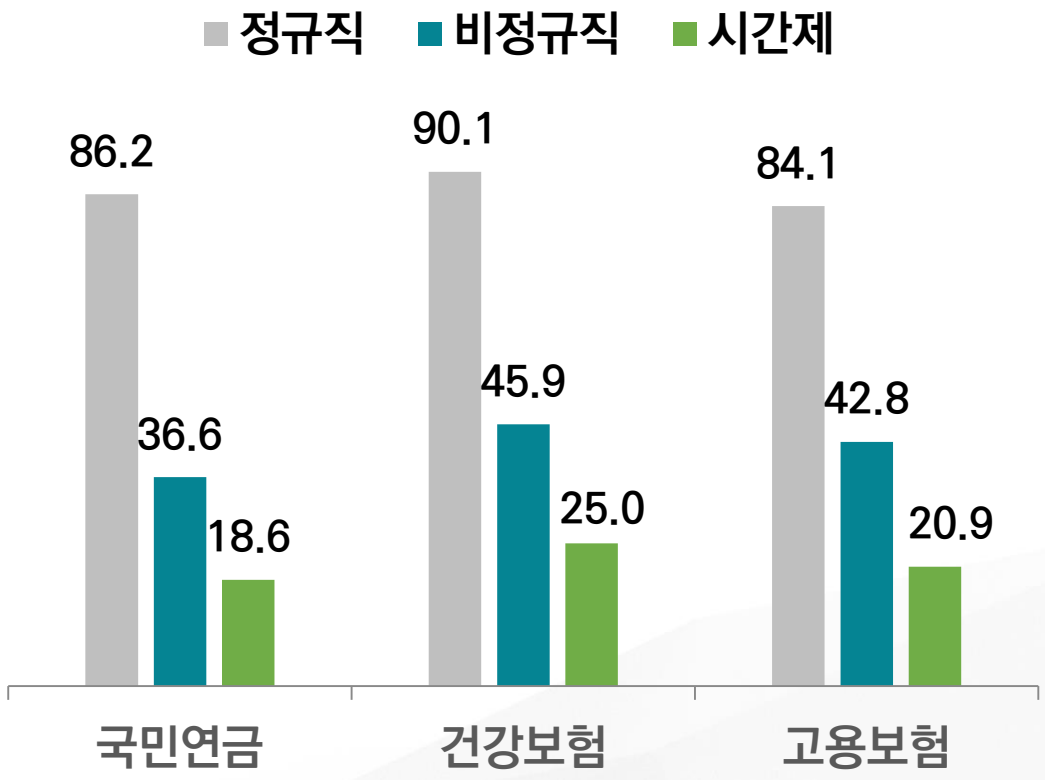
사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도 다수

중위소득 40%이하
비수급 빈곤층

약 93만명

('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)





* '18.8월 경제활동인구조사

포용적 복지국가로 국정목표 설정

전 국민 모두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
사회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

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
포용적 복지국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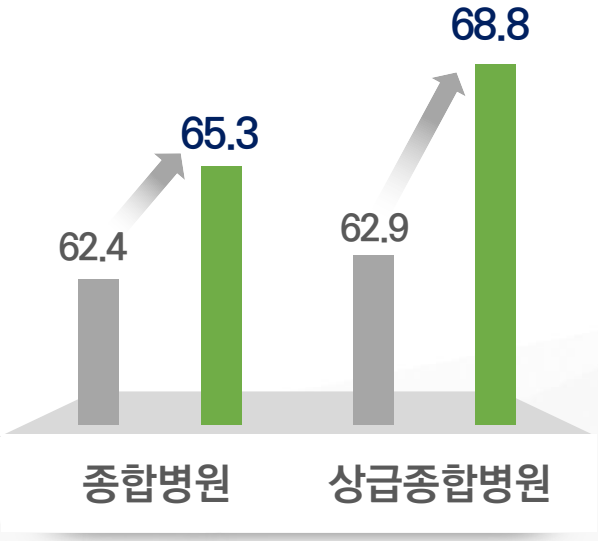
문재인 정부 2년, 포용적 복지의 틀 완성

소득·돌봄 보장



의료보장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

(건강보험 보장률, %)

2022년 까지 달라지는 국민의 삶

삶의 영역



- 국공립 이용률 40%
- **장애등급제 폐지 → 맞춤형서비스**
- **지역사회 통합돌봄**
- 치매 국가책임제
- 연간노동시간 감소
- 고교무상교육
- 대학 입학금 폐지
-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
- **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**
- 근로자 휴가지원

생활기반

소득

- **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**
- **아동수당 전면확대**
- **기초연금 인상**

환경·안전

- 미세먼지 감축
-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

건강

- **건강보험 보장성 강화**
- 지역간 의료격차 축소

주거·지역

- 신혼부부 주거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

Part Ⅱ

지역과 함께 하는
포용적 복지



지역사회로 향하는 포용적 복지

2019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

소득, 건강, 돌봄 등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

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

포용

-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
  - 빈곤 위기가구 발굴·지원 확대
- 활기차고 존중 받는 노후생활 지원
-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
-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
혁신

-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
- 보건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충
-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정책 혁신
  - 지역사회 중심 선진 사회보장체계 구축

1. 지역사회 통합돌봄

-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(탈시설) 지원하여 인권과 삶의 질 개선
- 고령사회의 의료비용 절감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



주 거

- 케어 안심주택
- 집수리 사업
- 도시재생 뉴딜



건강의료

- 방문건강서비스
- 방문의료 수가 신설
- 지역연계실 운영



요양 돌봄

- 차세대 장기요양보험
- 신규 재가서비스
- 재가 의료급여 신설

인프라 구축 · 케어안내창구(읍면동) · 지역케어회의(시군구) · 보건복지통합플랫폼 구축

지역사회 중심 선진 사회보장체계 구축

2.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



복지공무원 충원 ('22년까지 총 1만9천명)

* '18년 3,871명, '19년 3,932명 신규 채용



3. 사회서비스원 설립

민간기관
운영 지원

국·공립 사회서비스
제공 기관
직접 운영

* ’19년 4개 시도
→ ’22년 17개 시도

재가서비스
직접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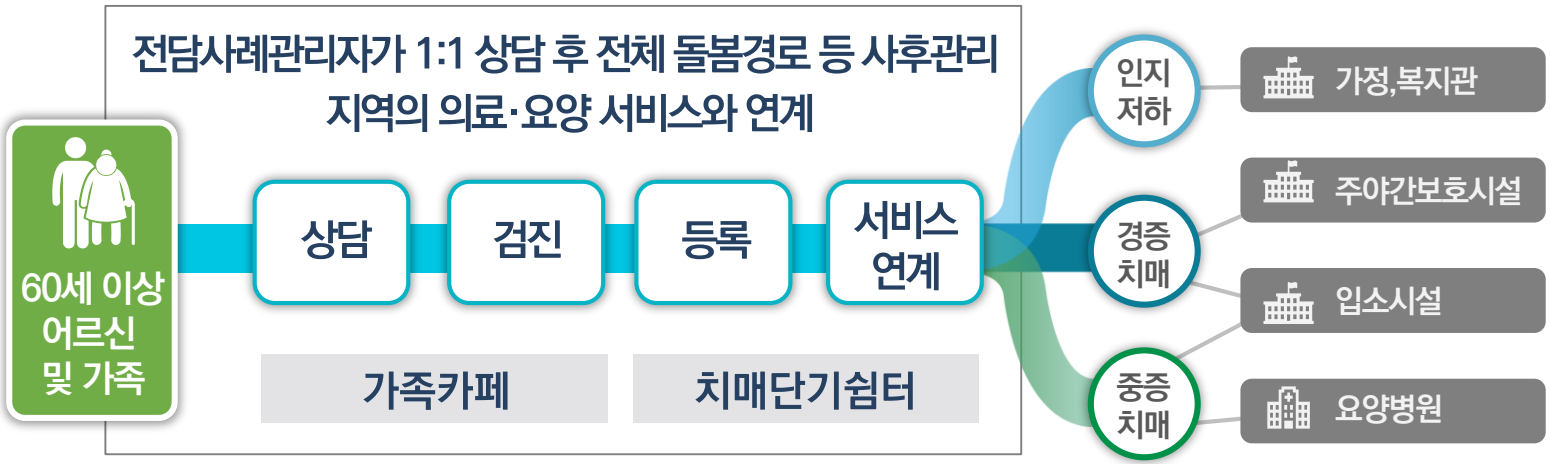


서비스 품질 제고

민간서비스질 제고

4. 치매 국가책임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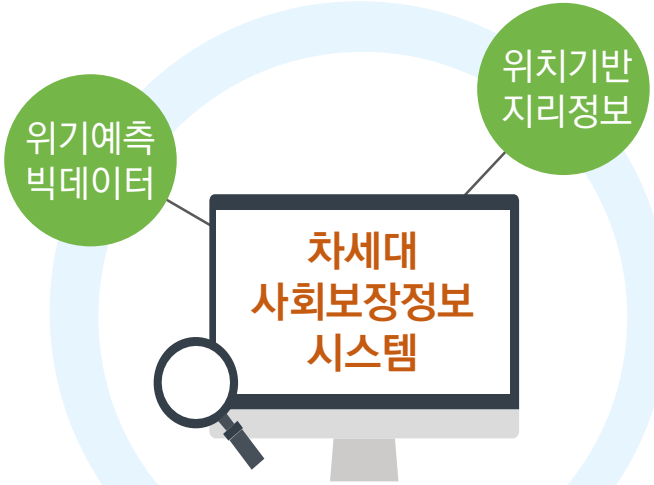
- 전국 시·군·구 보건소에 **치매안심센터** 설치 ('17년, 256개)



- **경증치매노인**(장기요양등급 外) 에도 서비스 제공
- **치매전담요양시설**, **치매전담병원** 등 치매전문서비스기관 확충

지역사회 중심 선진 사회보장체계 구축

5.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



- 지역별 자원·수요 분석
- 복지사각지대 발굴
- 지역 복지자원 map
-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지원

국민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- **복지멤버십**을 통한 맞춤형 안내
- 신청 간소화
  - 입력정보 및 첨부서류 축소
  - 복지 신청창구 확대 (병원, 복지관)

지자체 업무부담 경감

- 기준에 맞는 **대상자 자동선정**
- 인공지능 비서
  - 민원 안내 설명 지원
  - 자동 감지 및 알람 ⇒ 수급자 관리 지원

원친불여근린

遠親不如近隣

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 보다 낫다

Part Ⅲ

지역과 함께 하는
포용적 복지



한걸음 더 나아가기

1. 지방 자율성 강화시대 – 민관협력으로 대비

지방자치법 전면 개정(안)

-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
-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

⇒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

⇒ “지역사회서비스국”, “복지부단체장” 실현 가능

재정분권 추진방안

('18.10, 관계부처 합동)

- 지방의 자율성·책임성, 권한 확대, 재정격차 완화

⇒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

⇒ 지방세 확충 재원 11.7조원 사회서비스 분야 집중 투자 유도

재정과 자치 자율성 강화를 통한 “지역복지” 활성화 계기

2. 다양한 사례관리 방안-지사협형 모델도

희망복지지원단형 | 사회서비스원형 | 공립사회복지관형

생활 밀착형 보건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전달체계 개편을 위해
다양한 방식의 민관협력 모색 중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형

- 실무분과 **통합사례관리분과 기능 강화**
- 전문사례관리사 중심의 **통합사례관리 회의체 운영**
  - 지역사회 위기 발굴 시 긴급 개입
- **솔루션 회의** : 보건복지 외 법률, 고용, 주거 등 문제 해결 지원
- **수퍼비전** : 외부전문가에게 중간 점검 및 평가 의뢰

3. 정부정책의 완성도 제고

’19년 6월

지역사회 통합돌봄

- 민관협력,
  다직종연계의 원칙
  - 지역 케어회의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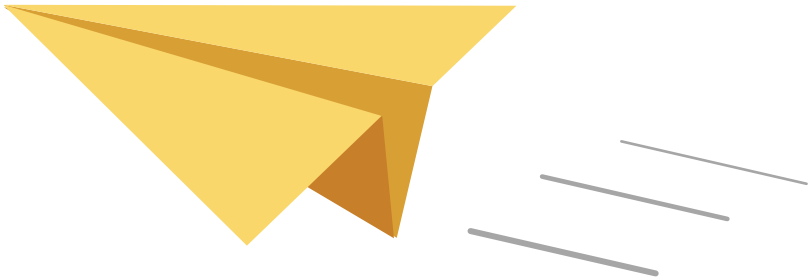
’19년 7월

장애인 등급제 폐지

- 장애인 특화 민관협력체 설치 운영
  - 지사협 장애인분과,
    통합사례관리 분과 활성화



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
정책의 품질과 완성도를 이끌어내는 주체!!



미래가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자.

우리가 '희망'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일으켜

뜻을 모아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었다고 말이다.